



“중국으로 오세요” 주광주 중국총영사관과 중국 국가여유국 서울지국이 공동주최한 ‘2010 중국 방문의 해’ 기념행사가 10일 오후 6시30분부터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상하이 엑스포’개최와 관련, 중국 방문의 해 시작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F1 대회 전반 재점검·감사 필요”

주승용·이석형 전남지사 예비후보 거론…지방선거 쟁점 부상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 정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의 최대 역점사업인데다 대회 개최일까지 불과 8개월 앞둔 F1대회를 놓고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주승용 국회의원과 이석형 전 합평군수가 각각 ‘도민 점검 보고회’와 ‘주민감사’를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회 성공을 위해 온 도민이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급선무이며 공과는 성공적 대회 개최 후 따져 묻는 것이 성숙한 도민의 자세”라며 숙박·교통·지원 인력·사후 활용방안을 포함한 ‘F1대회 성공을 위한 도민점검 보고회’를 개최할 것으로 제안했다. F1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회의 성공개최에

도민들이 온 힘을 모으고, 그 뒤에 책임을 따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2일에도 “F1 대회를 앞두고 숙박시설을 확보하려는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기보다는 실질적인 숙박대책과 교통대책을 내놓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군수도 이날 성명에서 “F1대회 준비소홀과 성공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가고 있어 대회 전반을 종합 점검하는 주민감사를 통해 박지사의 공적책임을 묻겠다”고 공격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공공재원을 투자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통해 공적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박 지사와 전남도는 밀실행정으로 일관해 혼선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감사의 주내용으로 ▲대회 추진 경위 ▲생산유발효과 검증 ▲각종 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 ▲도와 대회 제안업체(MBH)간 유착 의혹 ▲수익구조 ▲F1 대회 추진과 관련된 각종 협정서·합의서 내용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 관계 등을 제시했다.

주민감사제는 시·도나 시·군·구에 처리한 일이 공약에 반한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날마다 제기되는 상대 후보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수 있겠느냐”면서 “너무 심한 부분도 있지만,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집안의 한 사람이 강도 돌변한다면...”

박근혜, MB 발언 반박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강도론’ 발언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0일 공개 반박하고 나서면서 여론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전남 충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밀고 싶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강도론’과 관련, “백반, 천 번 맞는 얘기”라면서 “그런데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다면 어쩌까느냐”고 반문했다.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향후 여론 내부의 심각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일 잘하는 사람을 밀겠다’고 말한 것은 여야를 떠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도론에 대해선 “세계 경제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추가로 유럽발(發) 금융위기가 어디까지 진전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부 갈등을 일으키거나 정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는 의미”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충청북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세계와의 경쟁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기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가장 잘되는 집안은 강도가 오면 싸우다가도 멈추고 강도를 물리치고 다시 싸운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 친이(친 이명박), 친박(친 박근혜) 진영은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갈등을 거듭했다.

친이는 수정안 국민투표 등을 내세우며 여론몰이에 본격 나선 반면, 친박은 국민투표와 이 대통령의 ‘강도론’을 싸잡아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 추후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구성 합의

여야 의원 20명 참여…일자리특위도

여야는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를 구성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법원, 검찰, 변호사 등 사법분야 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신성범,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특위에

는 여야 의원 20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기로 했다. 또 특위내 법원개혁, 검찰개혁, 변호사개혁 소위 등 3개 소위를 두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일자리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하는 국회 일자리특위를 구성기로 했다. 일자리

특위의 활동 시한은 올 연말까지다. 이들은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유지토록 한 정치개혁특위의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와 소선거구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당소속 유기준 의원 등 ‘반대파’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민주당은 유 의원의 소선거구제 수정안 전면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기 처리 전망에 대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 의결 교육자치법 살펴보니

교육감 당적보유 금지 기간 1년으로

교육의원 교육경력 5년으로 완화

‘교육의원 일몰제’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교육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4년 후부터는 교육의원을 뽑지 않고 시도의원들이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됨에 따라 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먼저 터져 나온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교육 경력 5년이 그대로 유지된 교육감 선거는 애초 교과위에 추진했던 당적 보유 금지기간 삭제 방침이 철회되면서 정치인들의 입후보가 사실상 완전히 막히게 돼 교육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현 선거구도가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

◇교육자치 훼손 우려=교육계에서는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해 “교육자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당의 공천을 받

는 광역의원들이 교육의원을 대신하게 될 경우 교육의 금과옥조로 여겨온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계 인사들은 “이렇게 하면 이번 선거에서부터 교육의원을 뽑지 말 것이지 왜 세금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기류다. 4년 후부터는 교육감 경력 없이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한 것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크게 어긋난다는 평가다.

교육의원 준비를 해온 한 교육계 인사는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국회가 4년 후도 내다 보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기형적인 법안을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감 출마 노린 정치인은 몰상시=정치인들의 교육감 선거 출마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당적보유금지기간 방침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됐지만,

사실상 광주·전남지역 유력 정치인들의 교육감 선거 출마는 어렵게 됐다. 대부분의 정치인이 당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당적보유금지기간 조항이 삭제될 경우 교육감 선거 출마 가능성도 열려있던 양형일 광주시장 예비후보 등도 교육감 후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됐다.

전남도교육감 선거도 김장환 전 교육감 등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 현 선거체제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감 출마를 고민해 온 한 정치인은 “교육경력자만이 교육감을 할 수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면서 “개정안이 의결된 만큼 다음 (교육감) 선거를 기약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교육계 인사들 교육의원 출마 줄이 줄=교육경력이 10년에서 5년으로 교육의원 선거는 예전보다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육의원 의 숫자가 종전보다 줄어들고, 그동안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때문에 정치권과 연결 고리가 없다는 이유로

뜻을 접었던 현직 교육의원 등 교육계 인사들의 출마 발표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교육위원수는 현재 1선거구 3명(동구, 북구), 2선거구 4명(남구, 서구, 광산구) 등 7에서 서구 1명, 북구 1명, 광산구 1명, 동구·남구 1명 등 4개 선거구, 4명으로 축소된다. 이들 4명의 명칭도 교육위원에서 교육의원으로 바뀌며, 시의원 3명과 함께 교육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전남은 현 9명에서 ▲1선거구(목포, 완도, 해남, 진도, 신안) ▲2선거구(여수) ▲3선거구(순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4선거구(나주, 영암, 무안, 영광, 함평) ▲5선거구(광양, 담양, 장성, 곡성, 구례, 화순) 등 5개 선거구, 5명으로 줄어든다.

직선제에 따라 넓어진 교육의원 선거구도 이번 선거의 변수다.

한 교육의원 출마 예상자는 “선거 운동 범위가 넓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서 “직선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만큼 답답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